2001 地方公企業의 運營方向

송 영 곤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1. 머리말

새천년의 첫 해인 2000년도는 지방공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느 해보다 힘들고 한편으로는 보람도 많았던 해였다. 정부의 4대부문 개혁 추진에 지방공기업도 예외일 수만은 없어 작년 한해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고, 가시적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2001년은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또하나의 도전의 해가 되어야만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해에 그동안의 지방공기업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지방공기업법은 69년 1월 29일에 제정되어 7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지방공기업법은 상수도 사업 지원을 위한 차관 도입시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한 기업체계 도입 요청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정 초기인 70년대에는 주로 직영기업인 상수도 사업에 적용되었으나, 80년대 들어 공사공단 체제가 도입되면서 지방공사 의료원, 지하철이 추가되었고, 90년대 들어와 자치단체가 민간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형태의 제3섹터 분야가 추가되어 물류・무역・관광과 같은

분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었고, 민선자치와 더불어 주민복지서비스 제고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이 설립되었다. 특히 '99.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 폐지후 시설관리공단을 위주로 24개의 공기업이 신설되었다.

이렇듯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2001년은 양적인 측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정착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지방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의 공공부문 개혁과 보조를 맞춤과 아울러, 우수한 공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와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한 역(逆)의 인센티브 부여를 확고히 하여 공기업에도 경쟁의 원칙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주요현황과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올해의 지방공기업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地方公企業의 主要現況과 그 限界

1. 地方公企業의 主要現況

2000년 12월 31일 현재 지방공기업은 총 304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독립채산제와 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 173개와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 96개,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그 설립근거를 두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 35개가 있다.[1)]

1999년말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46조 1,961억원이고, 자본이 25조 7,147억원, 부채가 20조 4,81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9.6%로서 국내제조업 평균 부채비율(214.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건전한 편이다.

이중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총자산 14조 5,519억원, 자본 6조 1,654억원, 부채 8조 8,365억원이다. 또한 경영성과는 총

1) 지방공기업 설립현황은 별표 참조.

△9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으나, 지하철공사(△6,423억원)를 제외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98년도 3,750억원보다 무려 45.7% 증가한 5,464억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6,398명의 인력 감축과 14개 법인 통폐합 등 강력한 경영혁신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데다,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율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었고, 법인별로 당해 사업에 대한 경영효율성 개념을 과감히 도입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공기업 각 유형별 운영현황을 보면

상・하수도 등 173개 직영기업은 '98년도 3,556억원에 비하여 43.8%(1,560억원)증가한 5,11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상・하수도 조직을 통합하여 2000년말 현재 112개 단체가 통합운영되고 있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위탁추진하여 11단체 111구역이 민간위탁되었으며, 하수처리장시설 32개 단체 49개소가 민간위탁되었다.

서울・서울도시철도・인천・대구 등 4개 지하철공기업의 경우에는 지하철 건설시의 과다한 건설부채를 공사가 인수한 등의 이유로 6,42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98년 6,951억원의 적자에 비해 528억원(7.6%)이 감소된 것이다.

설립인가는 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의료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울진의료원을 제외한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전년도의 21억원보다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 한편, 이천, 군산, 마산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이 민간위탁중에 있고, 춘천의료원은 강원대에 매각되었다.

11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403억원으로 전년도의 319억원보다 2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결산대상 지방공단의 경우, 주차・시설관리공단을 합하여 2,2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었고, '99. 4.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폐지이후 24개의 공단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2], 상・하수도 및 지하철 요금의

2) 생산・판매단가 현황('99. 12월말 기준)
- 상수도 : 생산원가 535.3원, 판매단가 394.5원(73.7%)
- 하수도 : 생산원가 275.7원, 판매단가 130.6원(47.4%)
- 지하철 : 수송원가 628원, 평균요금 363원(57.8%)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낮은 요금수준을 적용한 결과 생산원가에 못미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을 목표로 하여 매년 10%씩 늘려 2001년에 100% 현실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화율이 2000년말 현재 잠정 78.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등을 2분의 1 미만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35개의 제3섹터의 경우, '99년도에 6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초기 과다한 차입에 의한 경영악화, 저렴한 무역대행 수수료 등으로 수익이 저조한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기관의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무리하게 민간합작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公企業의 設立目的과 그 限界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을 발전방향 등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그 목적으로 인한 한계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영역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종래에 행정기관 영역이었으나 경영마인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기업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샘물 등의 부존자원 개발·관광개발, 농축산물유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 업무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성격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격으로서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관료제적 비능률성이 나타나고,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사기업 영역과 다툼이 발생 할 소지가 있다.

Ⅲ. 지난해 推進한 地方公企業의 主要成果

1. 總 評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가 IMF 구제금융이라는 암울한 터널을 벗어난 시기라고 평가될 만큼 초반기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시기였다. 이는 정부, 공기업,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공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동안 성장위주의 경영환경에서 겪어보지 못하였던 조직통폐합, 민영화, 청산조치 등이 취하여졌고, 많은 수의 인력들이 감축되었으며 급여도 동결 또는 삭감되는 고통을 경험하였다.

아래에서는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운영현황과 경영혁신내용, 그리고 2001년도 지방공기업 운영방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과감한 構造調整과 經營革新

우선,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인력감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00년말까지 정원(22,368명)의 17.2%인 3,856명을 감축하였고, 2001년까지 19.4%인 4,326명 모두 감축토록 되어 있다.

공사·공단의 경우, 1998년도에 민영화·청산·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기로 확정된 14개 대상 공기업 중 11개가 통폐합 등 되었고, 3개 기업이 진행중이다.(<표 1> 참조)

공사·공단의 인력감축은 총 감축대상 6,398명(당초 총정원의 18%)중 5,829명이 감축되었고, 올해도 777명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연봉제, 조기퇴직제, 퇴직금지급율 개선 등 공기업의 내부 경영역량을

<표 1> 공사·공단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구 분	공 기 업 명	추 진 실 태
민 영 화	안성축산진흥공사	추진중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민영화 완료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추진중
청 산	김제개발공사	청산완료(인력, 조직 폐지 완료)
	문경도시개발공사	청산 완료
	고창화훼생산유통공사	〃
	금강도선공사	청산절차 진행중
통 폐 합	광주교통관리공사+ 광주체육시설관리공단	광주교통관리공사+광주체육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민간위탁	이천·마산·군산의료원	위탁 완료
인가취소	광주종합개발공사	인가취소 완료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혁신적 제도의 도입이 마무리중에 있으며, 개인평가를 토대로 한 개인성과급 및 경영평가를 근거로 한 기관성과급제가 도입중에 있다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영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나타난 경영실적 평가는 당해 법인들로 하여금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건전한 차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3. 經營의 責任性 및 專門性 提高

지방직영기업 63개 기업과 공사·공단 69개 기업, 총 132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관계전문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 첫 단계로서,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방법개선을 추진하여 평가지표 체계를 나열식 분류체계에서 주제별 분류체계로 개선하고, 계량평가 지표를 목표달성률에 의한 단일평가에서 목표달성율(80%) 평가와 전년대비 개선실적(20%)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주관해 오던 서울시산하 6개 공기업의 평가를 자치경영협회로 통일하여 경영평가 실시기관을 일원화하였고,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경영평가반 대비 1/3이상 교체하였고, 평가단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현지실사 등을 통한 경영평가를 수행하여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기관성과급을 기본급의 100~260%까지 차등 지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등 21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추진토록 하였다.

한편, 경영평가 결과 마급 판정을 받은 5개 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감축, 조직·사업축소, 경영혁신 제도도입 등 경영개선명령[3]을 지시하였고, 일부 장기적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동 조치사항의 이행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3) 이때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단기간내 경영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해 법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존립여부를 재검토, 존립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시 장기적으로 견실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영진단의 의미가 있다

Ⅳ. 2001年 地方公企業의 運營方向

1. 基本方向

지방공기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는 그동안 추진하여 온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함과 아울러, 2단계로 개별 공기업별 운영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자율과 책임의 상충을 넘어 양자의 절충과 조화를 통한 지방공기업 운영이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원과정에서 자구적인 혁신노력이 크고, 지역주민에 평가 및 경영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영으로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공기업들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이다.

2. 構造調整 및 經營革新 持續推進

우선, 지방직영기업에서 진행중인 상·하수도 기구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명실상부한 기구의 통합이 되기 위하여 회계의 통합운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추진하여 온 공사·공단의 구조조정을 매듭짓기 위하여 올해 2월까지 3개 공기업의 민영화·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해 지방의회에서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하여 처리계획안을 수차에 걸쳐 부결하는 등 민영화·청산이 지연되고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없으면서 민간부문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분야의 부실기업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부실기업은 종국에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공사·공단의 잔여 감축예정인력 777명의 감축을 완료하고, 기관·개인성과급의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인센티브(Incentive)는 동기유발을 위한 수단이며, 정보화 사회에서는 부(富)가 조직보다는 개인중심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종래 조직전체에 보상이 돌아가던 공동책임제보다는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개별책임제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구성된 급여관련 규정은 인센티브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해 연봉제, 성과급제가 대부분 도입되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성과급은 그간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1년 3월에 예산편성지침 등 준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이행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총 인건비의 2%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중 1%를 지급토록 할 예정이고, 나머지 1%는 경영혁신을 포함한 정부정책 준수여부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설립인가권이 폐지('99. 4.)된 이후 신설된 지방공기업에 대한 운영 개선조치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99. 1.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폐지되었다. 그 후 2년여 동안 무려 24개의 지방공기업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비용개념 도입의 정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해소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현황을 점검하여, 2개 신설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폐지를 검토토록 하였고, 유사기능 부서의 중복설치로 인한 과다인력을 감축토록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차후로도 신설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반기별로 운영실태를 진단, 불합리한 제도·인력·사업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설립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타 지역이 설립하니까 나도 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온정적 위인설관은 분명 지양되어야 할 폐해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일견 지방공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자제하여 국가자원의 배분에 낭비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공공복리의 달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위한 것이므로 단견에 의한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3. 經營實績에 대한 評價 및 診斷强化로 經營의 責任性 確保

2001년대 경영평가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사・공단의 경우는 설립된 지 1년 이상 된 모든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도 매년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도의 경영평가지표 보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지방공기업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개선하고 있다. 특히 계량지표에 비하여 비계량지표가 높아,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및 피평가자의 자료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비계량지표를 될수록 계량지표화하도록 하고, 평가지표 구성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복지표를 축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평가는 그 해의 경영실적을 우선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종래 서울시에서 평가하던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국자치경영협회 및 의료원연합회로 통합하여 전국적・통일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선・보완도 추진중이다. 동종의 공기업이라도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여 평가대상을 분류토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평가지표의 개선안은 각종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공유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등급을 토대로 한 인센티브는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 예로 2001년 경영평가 결과 지급하는 기관성과급의 경우, 우수공기업에 대하여는 기관성과급을 현 260%에서 300%로 확대하여 지급토록 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요소에 정부지침 준수여부를 현행보다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평가결과 부실공기업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여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대상사업축소, 인원감축 및 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한 공기업에 대한 폐쇄조치를 함으로써, 공기업을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 올해의 경우 6개 경영부실 공기업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4. 地方公企業 經營效率性 提高

지방공기업의 경영은 잘 정비된 제도와 유능한 인력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도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상·하수도 사업중 공기업 대상 단체의 공기업 전환, 상·하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수준으로의 현실화 목표 달성을 비롯하여 요금체계의 개선, 지역간 요금격차 해소 등 상수도 관련업무의 제도개선, 상·하수도 기구통합 및 민간위탁을 지속추진하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맑은물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공채 강제소화근거의 법정화를 비롯하여 매출기준·업무처리절차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역개발기금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보수규정 등 중요 규정을 전면 검토·개선하여, 공기업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고, 지방공기업의 당연직 이사수를 현재의 3~4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여 비상임 사외이사진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상임 사외이사도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고,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에 있다.

한편, 인건비 절약, 당기순이익 증가, 주요사업비 절감, 대행사업비 절감 등에 대한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체경영 합리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5. 責任性 確保를 爲한 地方公企業法 改正

정부는 '99. 1월, 1차로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권의 폐지, 경영진단 규정의 신설 등 지방공기업 사전진입규제의 폐지 및 지방공기업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제3섹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필요사항이 도출되어, 추가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경영평가를 행자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섹터 사채발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의 제한 및 요건 미비시 청산 등 조치와 함께, 지역개발공채 매입근거의 법정화

검토, 공기업 대리인 선임규정, 임직원 교육훈련 강화, 지방공기업 직원 임면시 공개경쟁원칙 및 능력의 실증에 의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 운영중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6. 新勞使 文化의 定着

2000년의 경우, 임·단협과 관련하여 지방공사의료원, 지하철공사 등에서 파업을 하거나 파업 직전까지 가는 등 순탄치 않은 노사관계를 경험하였다. 이렇듯 지금까지 노사관계는 노사간의 대립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사측은 투명경영을 통하여 노측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측은 회사의 경영정보를 공유, 어려운 시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것은 상생의 관계이다. 이는 또한 노사문제를 "관리"의 개념에서 "협조"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노사 모두는 기업경영실적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공기업이 더욱 발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기업 구성원들에게도 보다 나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7. 經營情報化 및 經營마인드 强化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정보화는 미래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경영요소이다. 당장 투자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를 늦추면 그 만큼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공기업의 서비스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경영정보화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화 구축예산 등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경영정보화 기반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관리자들의 경영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공사·공단이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적당히 기업을 운영해서는 살아날 수 없다. 공사·공단만이 공공성 있는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성테스트를 통하여 민간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이라면 민간기업도 공사·공단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공사·공단의 운영방향을 전망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경영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자들의 전략적 비젼수립을 위한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미 민간기업보다 먼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도 많다. 이러한 공기업은 당연히 수익성 증가로 귀결된다. 이는 지방공기업도 하기 나름이라는 반증이다.

Ⅴ. 結　論

올해도 행정자치부는 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이 더욱 발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될 때, 지방공기업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좀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일종의 기업이다. 기업은 경영실적으로 말한다. 경영실적은 곧 수익성을 말하며, 수익성을 내지 못하면 당해 공기업은 언젠가는 지역에서조차 퇴출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냉엄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성"으로 방어되는 적당한 경영의 요람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고 이를 향해 전 임직원이 매진해 나가야 한다. 지방공기업 운영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자신도 과감한 의식개혁을 통한 지방공기업 운영기반정착에 나서야 하겠다.

2001년에는 전 지방공기업이 제도와 인적자원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운영기반을 정착해 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도 부단히 노력할 예정이다.

〔별 표〕 地方公企業 現況(2000. 12. 31.현재)

<總 括>

계	직접경영사업					간접경영사업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소계	지 방 공 사					지방공단	주식회사
							소계	의료원	도시개발	지하철	기타		
304	173	92	22	44	15	131	63	34	11	4	14	33	35

<直接經營事業> — 173개

세 부 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73	
상 수 도	92 (시78, 군1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안성, 이천시, 화성, 광주, 연천, 포천, 양평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시, 홍천, 정선, 철원군, 청주, 충주, 제천시, 옥천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시, 예산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 완주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시,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
하 수 도	2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천, 성남, 구리, 춘천, 청주, 전주, 완주, 나주, 경주, 구미, 제주시
공영개발	44 (시도5, 시군39)	인천·울산광역시,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산, 고양,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안성, 김포,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제천시, 음성군, 천안, 아산, 보령시, 연기군, 계룡(출), 전주, 익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포항,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시, 양산군
지역개발 기 금	1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간접경영사업> – 131개

형 태 별	사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31	
지방공사	소 계	63	
	의 료 원	3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도시개발	1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 하 철	4	서울(2), 대구, 인천
	기 타	6	서울농수산물공사(서울), 금강도선공사(군산), 송파개발공사(서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시, 서울시), 마포개발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지 자 체 50%이상 출 자	8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하남개발공사,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구미경북원예수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광주지방공사
지방공단		33	시설관리공단: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안성, 화성, 성남, 파주, 강북구, 종로구, 강서구, 강남구, 인천서구, 용인, 부평구, 속초시, 과천시, 계양구, 양천구, 성북구, 춘천시, 연천군, 창원시, 부산환경, 대구환경시설, 주차관리공단:동작, 인천, 울산, 구미, 기타 : 창원경륜
주식회사	소 계	35	
	지 자 체 25~50% 미만출자	24	(주)부천카툰네트워크, (주)부천무역개발, (주)경남무역, (주)무학산청샘물, (주)제주교역, (주)안산도시개발, (주)대구종합무역센터, (주)전북종합무역, (주)대구종합정보센터, (주)전남무역,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주)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터, (주)부산관광개발, (주)안면도관광개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제주컨벤션센타, (주)경북농산물물류센터, (주)구례지리산샘물, (주)파주혼합사료, (주)대전농수산물물류센터, (주)목포농수산, (주)한국CES, (주)인천도시관광, (주)효원
	지 자 체 25%미만 출자	11	(주)경북통상, 부산정보단지개발(주), (주)K3I, 울산일산유원지개발(주), 진로지리산샘물(주),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 (주)테즈락, (주)대구복합터미널, (주)경축, (주)도봉, 코다개발(주)